

‘돈가뭄’ 서민들

대부업 이용 4년만에 늘었다

시중은행은 물론 제 2금융권에서조차 돈을 빌리지 못해 대부업체에 손을 내민 이들이 4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거듭된 기준금리 인상 탓에 자금 조달금리가 오르자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신용대출 규모를 축소했고, 이에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질 낮은 대출 창구로 밀려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은행·통계청·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신용대출 가구 중 대부업체 등 '기타 기관 등'에서 돈을 빌린 가구 비중은 7.9%로 지난해(6.9%)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9년(11.4%) 이후 4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다.

'기타 기관 등'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우체국·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여신업체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올 3월 7.9%로 전년비 1.0%p 상승...소득 하위 20% 13.1% 차지
고금리 장기화 등 영향 저신용 등급 서민 불법 사금융 내몰릴 수도

제도권 내 마지막 창구다.

2019년 정점을 찍은 '기타 기관 등' 대출 가구 비중은 매년 하락해 지난해 6.9%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8% 턱밑까지 상승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기타 기관 등' 대출 비중이 13.1%로 가장 높았다. 소득 5분위(6.4%)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또 다른 급전 대출 창구 중 하나인 보험회사 신용대출 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0.8%에서 1.1%로 상승했다.

반면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주 비중은 78.8%로 지난해(79.8%)보다 1.0%포인트 하

락했다.

은행 대출 가구 비중은 2019년(75.3%) 이후 매년 상승하다가 4년 만에 뒷걸음질 쳤다.

저축은행, 우체국·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가구 비중도 지난해보다 각각 0.2%포인트씩 하락한 3.8%, 8.4%로 집계됐다.

지난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금리가 오르자 저축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이 신용대출 규모를 줄였고, 결국 제도권 내 마지막 창구인 대부업체로 신용대출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조달·대출금리 상승으로 저신용자를 상대로 한 대출이 일부

중단되는 '컷오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신용카드사들도 신용대출을 줄이는 모습이 관찰됐다.

문제는 고금리 장기화와 조달금리 상승으로 최근 대부업체마저 대출을 줄이고 있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나이스(NICE) 신용평가회사(CB) 기준 대부업체 69개사가 내준 신규대출 규모는 950억원으로 전년 동월(3066억원) 대비 69%(2116억원) 감소했다.

한편, 불법 사금융 기승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황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차단과 불법이익 박탈 등 다각적인 방법 강구를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간담회 후속조치 일환으로 대부업체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개사 등 1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 말까지 4개 반이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는 등 서민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추심 행위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자는 엄중조치하고, 필요 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는 2020년 580건에서 2021년 869건, 2022년 1109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902건에 달하는 등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등과 협업체 약탈적 채권추심 관행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정윤영 기자 zzang@연합뉴스

광주은행,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협약

1000만원 성금

광주은행은 광주경찰청,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 성금 1000만원을 광주경찰청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실종 우려가 있는 지역 거주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배회감지기를 보급, 관리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배회감지기 구입 및 유지비용을 지원하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배회감지기를 보급, 관리한다. 또 광주경찰청은 지급된 배회감지기를 통해 실종 환자의 신속한 발견에 힘쓰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협약식에서 광주지역 사회적 약자 및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지원하기 위해 광주경찰청에 1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 및 발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쳐, 지역 곳곳에



나눔 문화를 전파하고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해 29일 광주시에 치매 어르신을 위해 배회감지기 지원 후원금 약 9000만원

상당의 배회감지기 300대를 지원한 바 있으며, 전남도에도 약 9000만원 상당의 배회감지기 30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중기 2곳 중 1곳 "내년 경영환경 올해와 비슷"

소규모 중기 10곳 중 3곳 "더 악화"...핵심 경영전략 '사업 다변화'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내년 기업 경영 환경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20~24일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 실태 및 2024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7.4%가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26.8%였고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15.8%에 그쳤다.

응답 기업 중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55개) 대상 조사에서는 내년 경영 환경이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36.4%로 더 높았다.

내년 핵심 경영 전략(복수 응답)으로는 신규 사업 추진 등 사업 다변화가 48.6%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원가 절감과 긴축(42.4%),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25.8%), 신규 판로 확대(25.8%) 등의 순이었다.

내년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금융 비용 부담 완화(64.6%)가 1위였고 다음으로 주

52시간제 개선 등 노동 유연화(35.4%),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지원 확대(27.4%) 등 순이었다.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을 위해 가장 대비가 필요한 요소로는 절반 이상(50.8%)이 노동인구 감소를 꼽았고, 산업변화에 뒤처진 규제(26.6%), 첨단 기술 수준과의 격차 확대(10.2%) 등도 지목했다.

올해 경영 환경에 대해서는 49.8%가 어려웠다고 평가했고 어렵지 않았다는 응답은 18.4%에 그쳤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1.8%였다.

경영년의 주요 요인(복수 응답)은 수요 위축(47.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31.7%), 금리 인상(30.9%), 자금조달 곤란(29.7%), 원자재 가격 상승(24.5%), 인력난 심화(22.5%) 등 순이었다.

올해 가장 유용했던 정부·지자체 정책은 세금 감면·납부유예(23.2%)와 대출만기 유예·연장(19.2%), 경영안정 지원(16.0%) 등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효성그룹 5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 선정

효성그룹 5개 회사가 5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으로 선정됐다.

10일 효성그룹에 따르면 ㈜효성,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5개 회사가 지난 8일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2023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으로 선정됐다.

올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는 E(환경경영), S(사회적 책임경영), G(투명경영) 3개 영역 중 7개 분야 25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효성과 4개 사업회사는 2019년 처음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으로 인정받은 것을 시작으로, 5년 연속 선정되는 기업을 토론했다. 특히 장애 전문 어린이 이집 활동 지원, 마포구 사랑의 쌀 나눔,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나눔, 장애 어린이 재활 치료 프로그램 지원, 장애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평소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효성이 되겠다"고 밝혀 왔다.

한편, 효성그룹은 "나눔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라

는 슬로건 아래,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후원, 호국보훈 3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수익성 악화' 카드사, 신차 구매 혜택 축소

신한·KB·삼성·롯데 등 캐시백 줄이고 무이자 할부도 중단

고금리 상황이 지속하고 경기악화로 수익성이 하락하자 카드사들이 소비자 혜택을 줄이고 있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신차를 구매할 때 제공하는 카드 캐시백 혜택을 최근 줄이는 추세다.

신한카드는 지난 9월 말 기준 오프라인에서 일시불로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캐시백을 1.0% 지급했다가 10월 말 0.8%, 11월 말 0.6%로 축소했다.

삼성카드는 9월 말 1.0%에서 11월 말 0.7%로, KB국민카드는 0.9%에서 0.7%로, 롯데카드는 1.0%에서 0.5%로 캐시백을 줄였다.

다만 현대카드(0.8%), 우리카드(1.0%), 하나카드(1.1%)는 이 기간 캐시백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 할부금융 금리 역시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할부를 취급하는 6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하나·롯데·우리카드)의 할부금리(신형 그랜저 구매 시, 30% 현금·36개월 할부 기준)는 이달 초 기준 연 5.2~8.7%이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신한카드 상단은 6.3%에서 6.5%로, 하단은 5.9%에서 6.1%로 올랐다. 삼성카드는 하단이 6.3에서 6.9%로 상승했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이 취급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은 올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6개사의 자동차 할부 금융 자산은 10조1632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6460억원) 대비 4.5% 줄었다.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가 지속하는 상황을 고려해 건전성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들은 작년 말 이후 수익이 나지 않는 여타 혜택도 줄이는 추세다.

현재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은 세금·4대 보험 납부에 대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 로또복권 (제1097회)

당첨번호						2등	
14	33	34	35	37	40	보너스숫자	
						4	
등위						당첨금액(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3,864,293,090	7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 일치					67,288,686	67
3	5개 숫자 일치					1,713,547	2,631
4	4개 숫자 일치					50,000	135,670
5	3개 숫자 일치					5,000	2,317,263

광주상의, 12·20일 연말정산 실무강좌 개최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오는 12월과 20일 7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대비 실무강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신고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해마다 바뀌는 개정사항을 안내 한다.

오는 12일 교육은 총 7시간 과정으로 한국세무사회 고시회 회장인 이석정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며 ▲연말정산 사전 준비 및 절차 ▲근로소득의 개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과정별

세분화 내용과 새로 개정된 사항 및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20일 강좌는 중급 실무자 대상 강좌로 최재운 세무그룹 의정 세무사가 ▲과세표준 구간 변경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상향 ▲월세 세액공제 주택 기준 완화 등 전년과 달라지는 항목을 중심으로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수강생에게는 교육 교재와 수업료, 당일 무료 주차가 제공되며, 교육 신청은 광주상의 홈페이지(www.gicci.or.kr)를 참고하거나 회원사업본부(062-350-5883)로 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